황찬현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정국 경색 심화

〈감사원장 후보〉

민주, 문형표 복지장관 후보 사퇴와 연계

새누리 "野 제안 수용 불가…기다리겠다"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전망이 어두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14일 법인카드의 사적유용 의혹이 불거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문제를 황찬현 감사원장·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문제와 연계키로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민주당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일단 수용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1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의 황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감사원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는 등 정국경색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문 후보자가 자진사퇴할 경우 황 후보자에 대한 본회의 임명동의안 처리와, 본회의 인준 절차가 필요없는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를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한 뒤 전병헌 원내대표가 청와대와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3명의 후보자가 모두 부적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문 후보자는 도덕성과 자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박근혜정부에서 제3의 인사참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문 후보자의 사퇴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요구를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전달했고, 정부 여당의 입장을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당 핵심 관계자도 "문 후보자 스스로 거취 문제를 언급했던 만큼, 최소한 문 후보자는 스스로 그만둬야 한다"며 "문 후보자가 계속 버틴다면 황 후보자 인준도 우리로선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입장은 오는 18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앞두고 여권을 최대한 압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문 후보자는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카드의 사적유용 의혹이 제기됐고, "사적으로 법인카드를 쓴 게 밝혀지면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그만둘 것인가"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여권은 즉각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일단 수용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입장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초 이날 오후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해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감사원장후보자 인사청문특위는 열리지 못했다.

이에 감사원장 인사청문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오늘 황 감사원장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인해 무산됐다"며 "새누리당은 단독으로도 처리할 수 있었지만 야당과 합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자세로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 전에는 처리해주지 않으려는 의도 같다"면서 "시정연설이 있고 나면 다른 명분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도 임명동의안 처리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14일 오전 국회 운영위에서 열린 대통령 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박근혜표 예산' 삭감 추진

'부자감세' 철회 촉구 등 '예산전쟁' 예고

민주당이 '박근혜표 예산' 삭감을 추진하는가 하면 '부자감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지 뜻을 밝히고 있어 치열한 '예산전쟁'이 예고되고 있다.

14일 민주당 '2014 예산안 심사전략'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355조7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 가운데 삭감 대상으로 ▲'박근혜표' 예산 ▲불법 정치개입, 대국민 교육사업 예산 ▲국정원·검찰청·경찰청·국세청 등 권력기관 예산 ▲특정지역 편중예산 등을 정했다.

'박근혜표 예산'에는 개발도상국 새마을운동 확산 사업(올해 111억원→2014년 227억원), DMZ 평화공원 조성사업(신규 402억원), 청년창업 엔젤펀드(1000억원),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 펀드'(700억원)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또 ▲88올림픽고속도로(대구, 2000억원)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부산, 2092억원) ▲포항영덕고속도로(경북, 98억원) 등을 '특정지역 편중예산'으로 분류하고 삭감 대상에 포함했다.

반면 민주당은 무상보육·급식에 대한 지원을 확대(약 1조원 추가 소요)하며, 경로당 난방비(내년 예산 미반영)·가습기 살균제 피해자(108억원)를 지원하고, 쌀 변동 직불금 목표가격을 19만6000원으로 인상(올해 252억원→2014년 1050억원)하기로 했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가부도, 지방재정 파탄으로 내모는 재정운용 기조를 개혁하고 MB(이명박)정부의 감세기조 계승을 포기한다고 선언해야 한다"며 "그래야 내년도 예산안이 원만히 처리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박 대통령은 부자감세로 혜택받은 재벌, 대기업, 고소득자 과세 강화로 세입기반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시정연설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진태 후보자 "별건수사 않겠다"

대화록 유출 관련 필요한 사람은 반드시 조사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13일 '별건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해 현재 진행 중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수사는 물론 기업인 수사에서도 적용되는 등 수사 관행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이날 밤 늦게까지 진행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검찰총장 내정자가 '특수부 수사를 지금까지 너무 밀어붙였다. 그리고 너무 거칠다. 앞으로 별건수사는 하지 않겠다. 압수수색과 무차별 소환 등 저인망수사 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 이건 다시 말해서 강압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 아니냐"고 묻자, "그렇습니다"고 답했다.

그는 또 "(별건수사·강압수사 안 하겠다는 말) 국민 앞에 약속하라"고 요구하자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의혹 수사에 대해서도 별건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앞서 김 후보자는 최근 한 자리에서 "검찰 수사는 드러난 범죄에 대해서만 신속하게 환부를 도려내는 식으로 해야지 피의자의 모든 범죄를 다 밝혀내겠다고 하면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평소에도 ▲별건수사 ▲저인망 수사 ▲장기수사 등은 문제가 많다며 이런 수사는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시로 밝혀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자는 이날 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사전 유출·불법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는 "검찰총장이 되면 철저히 따져 필요한 사람은 반드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해 "수사 의지가 있는가. 엄정한 수사를 할 것인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국정원도 불법을 저지르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 남 원장도 예외가 아니지 않은가"라는 박 의원의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이 이날 검찰 조사를 받은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에 대해 수사 의지가 있느냐고 질문하자 "네"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경호실 3급이상 간부 절반 '영남출신'

공공기관장 34명 '낙하산 인사' 추궁

대통령비서실 등 3곳 국감

국회 운영위원회의 14일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부산·경남(PK) 지역에 편중된 인사문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및 관련 수사 은폐 의혹 등이 쟁점이 됐다.

야당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인사 전횡 문제 등을 집중 거론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청와대의 입장을 옹호하는 데에 시간을 할애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경호실 3급 이상 간부 39명 가운데 영남 출신이 59%(23명)를 차지한 반면 수도권 출신이 15.4%(6명), 그 외 지역 출신이 25.6%(10명)에 불과하다"며 경호실 인사가 특정 지역에 편중됐음을 따졌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도 김 비서실장에게 감사원장과 검찰총장 사전 내정설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같은 당 장하나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임명된 공공기관장 78명 가운데 45%(34명)가 낙하산 인사였다"며 "이는 이명박 정부 시절 낙하산 인사 비율 32%를 훨씬 웃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홍경식 민정수석의 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 간에 설전이 벌어지면서 한때 정회 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민주당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중도 사퇴와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등을 추궁하기 위해 홍 수석이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은 '의혹 부풀리기용' 정치 공세라고 맞선 것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주승용·이용섭·이윤석·백군기·김광진·주영순 의원 포함

여야,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자 60명 확정

여야는 14일 오는 19일부터 닷새간 실시되는 정기국회 대정부질문과 관련, 총 60명의 질문자 명단을 확정했다. 대정부질문은 19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20일 외교·통일·안보, 21~22일 경제, 25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걸쳐 진행된다.

대정부질문에는 의제별로 12명씩, 60명이 나서며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30명, 민주당 25명, 비교섭단체 5명 등이다.

다음은 대정부질문 의원 명단.

▲정치 분야(19일) = 김성태 노철래 김을동 이철우 김동완 이장우(이상 새누리당), 원혜영 신계륜 추미애 양승조 전해철(이상 민주당), 서기호(정의당)

▲외교·통일·안보(20일) = 정몽준 원유철 유기준 황진하 이완영 송영근(이상 새누리당), 주승용 이용섭 김현미 박수현 박민수(이상 민주당), 강동원(무소속)

▲교육·사회·문화(25일) = 강길부 김재경 권성동 정문헌 경대수 김기선(이상 새누리당), 도종환 최민희 유은혜 김성주 박홍근(이상 민주당), 정진후(정의당)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진보당 오늘 국고보조금 예정대로 지급

활동정지 가처분신청 받아들여져도 환수는 못해

통합진보당이 정부의 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에도 불구하고 15일 예정대로 올해 4분기 국고보조금 6억8000여만원을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중앙선관위는 14일 "새누리당과 민주당 등 4개 정당에 대해 15일 올해 4분기 국고보조금 93억8000여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각 정당별 지급액은 새누리당 43억4000여만원, 민주당 38억5000여만원, 통합진보당 6억8000여만원, 정의당 5억여원 등이다.

선관위는 "15일 이후에 헌재가 통합진보당 활동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현행법에 관련규정이 없어 국고보조금을 환수할 수도 없다"고 선관위는 덧붙였다.

/연합뉴스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6계>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단위:원]	비고
[아파트]					
2013타경7456	1	목포시 상동로 43, 203동 3층 305호 [상동,상동2단지아파트] 38.64㎡	아파트	46,000,000 46,000,000	임차인있음
2013타경7616	1	목포시 남악2로22번길 10, 107동 16층 1601호 [목암동,한라비발디] 114.63㎡	아파트	326,000,000 326,000,000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13타경7326	1	목포시 산정동 1040-141 50㎡	대	21,976,300 21,976,30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증축2층 현황25.2㎡]
		목포시 신촌로20번길 9-1 26.45㎡ 제시외주택 25.2㎡	단독주택		
2013타경8305	1	신안군 지도읍 당촌리 385 271㎡	대	15,524,100 15,524,10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
		신안군 지도읍 묘동길 23 66.87㎡ 제시외보일러실 1.9㎡	단독주택		
[대지/임야/전답]					
2013타경1946	1	무안군 현경면 용정리 620 1266㎡	전	18,483,600 18,483,6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3타경2932	1	신안군 팔금면 원산리 산34 19026㎡	임야	19,026,000 19,026,000	분묘소재.분묘기지권성립여지있음
2013타경4761	1	영암군 삼호읍 산호리 438 936㎡	전	69,792,000 69,792,000	수목포함
	2	동소 452 787㎡	답	59,812,000 59,812,000	
	4	동소 산55-1 1653㎡	임야	137,541,000 137,541,000	일괄매각.분묘소재,분묘기지권성립여지있음
		동소 산55-3 760㎡	임야		
	5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산83 1157㎡	임야	38,181,000 38,181,000	
2013타경5306	1	신안군 흑산면 예리 산144 10712㎡	임야	9,355,200	일괄매각
		동소 산144-2 982㎡	임야	9,355,200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단위:원]	비고
2013타경5528	1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216-1 640㎡	답	203,614,000 203,614,000	일괄매각
		동소 216-16 241㎡	답		
		동소 216-15 336㎡	답		
		동소 216-17 272㎡	답		
2013타경5924	1	무안군 일로읍 죽산리 1600 4975.9㎡	답	353,288,900 353,288,9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3타경7135	1	함평군 대동면 백호리 983-1 1805㎡	답	16,606,000 16,606,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3타경7197	1	함평군 신광면 보여리 560-3 795㎡[한기호 지분2분의1전부]	답	11,250,000 11,250,000	일괄매각.농지취득자격증명요.공유자우선매수행사제한있음
		함평군 신광면 송사리 564-2 2532㎡[목록1과지분동일]	전		
2013타경7753	1	신안군 압해읍 송공리 산177-1 1149㎡	임야	36,660,000 36,660,000	일괄매각
		동소 산177-4 345㎡	임야		
2013타경7876	1	무안군 현경면 해운리 1432-13 1383㎡	답	13,691,700 13,691,7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3타경8008	1	신안군 지도읍 읍내리 587 52평	답	1,563,800 1,563,800	일괄매각.농지취득자격증명요.공유자우선매수행사제한있음.안영기지분10분의1전부
		동소 602 1408㎡	전		
		동소 605 11평	답		
		동소 606 21평	답		
		동소 607 151평	답		
		동소 604 15평	답		
2013타경8244	1	무안군 청계면 상마리 908 1078㎡[공유자 강흥원지분전부[3분의1]]	전	7,186,666 7,186,666	농지취득자격증명요.공유자우선매수권제한있음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2013타경4570	1	무안군 운남면 내리 1005-126 236㎡	대	39,877,600 39,877,600	일괄매각.임차인있음.비매각제시외건물있음
		동소 1005-126 주택및소매점 66.4㎡	주택등		
2013타경7517	1	목포시 상동 1004-4 428.9㎡	대	1,270,908,730 1,270,908,730	일괄매각.임차인있음
		목포시 통일대로37번길 34 지하1층345.12㎡[음식점및주차장] 1층309.77㎡[음식점및소매점] 2층309.77㎡[사무실] 3층309.77㎡[학원] 4층199.53㎡[주택]	근린시설 및주차장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2. 매각기일 : 2013. 12. 2.[월]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3. 12. 9.[월] 14: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01호 경매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신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ㆍ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3. 11.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사법보좌관 이영복